

긴급 토론회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일 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 국회본관 223호

주 관 |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공동주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이정미, 심상정, 추혜선

프로그램

좌장 박인숙 정의당 전국여성위원장

발제 및 토론

발제1 여성위생용품과 화학물질안전

최경호 교수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발제2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대책

조현희 의사 |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발제3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생리대 사태 진행경과와 제안

이안소영 사무처장 | 여성환경연대

토론1 위기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

고혜미 방송작가/pd | SBS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튼> 제작

토론2 생리대를 통해 본 여성의 건강권

이유림 연구자 |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토론3 생리대 안전성 조사는 시작, 안전한 생리대로 여성건강권 확보를!

박지아 여성위원장 | 정의당 서울시당

발제1

여성위생용품과 화학물질안전

최경호 교수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 생리대 안전성 이슈의 도전

생리대 유해물질 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최근의 불안과 사회적 논의는 여성건강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안전망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1회용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이 시장에 나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벌써 40여년이다. 과거부터 많은 여성들이 1회용 생리대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피해를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최근의 생리대 안전성 논란은, 늦었지만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망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생리대는 여성위생용품의 하나다. 여성위생용품이 직접 닿는 신체의 부위는 발생학 및 해부학적으로 일반적인 피부와 다르다. 질점막은 점액 분비가 활발하여 유해미생물에 대처하기 용이하지만, 혈관계가 발달되어 있고 피부보다 각종 화학물질에 흡수성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점막)의 구조와 두께가 특수하며, 습기(hydration), 마찰 취약성 등의 조건도 다르다. 게다가 여성 외음부는 해부학적으로는 물론 의복류에 의해서도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경우 노출이 쉽게 될 수 있다.¹⁾ 이 때문에 여성위생용품 함유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확인과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1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은 여성건강을 위한 기반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여성건강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성위생용품 전반

1) 여성 외음부의 피부는 일반적인 피부와 달리 발생 기원이 다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화상피가 존재하는 일부 피부가 생식기에 가까이 갈수록 점차 각화층이 얇아지다가 비각화점막으로 바뀐다. 이 두가지 종류의 피부는 일반적인 피부보다 화학물질을 더 잘 흡수한다. 지용성 물질도 일반 피부에 비해 흡수가 잘 되지만 수용성 물질에 대한 흡수도 일반피부에서보다 더 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발제를 통해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의 화학물질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제안하고자 한다.

2. 여성위생용품과 화학물질 노출

(1) 여성위생용품의 종류와 사용실태

여성위생용품은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1) 생리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흡수를 위한 생리용제품과 (2) 여성 생식기의 청결 유지 목적의 여성청결제 등이 있다.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여성위생용품 중에서 양과 사용 빈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탐폰, 생리컵, 팬티라이너, 생리팬티 등이 있다. 여성은 평균 40여 년 동안 월경을 하며, 이 과정에서 약 12000개 가량의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생리용품 시장은 생리대가 전체의 80.5%를 차지하며 팬티라이너가 13.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여성청결제에는 여성 테오도란트, 세척제(douche), 여성과우더, 여성비누, 여성 클렌징 와입스 등이 있다. 여성청결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다가 2010년 화장품으로 재분류되었으며 총생산액도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27.3%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²⁾ 우리나라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상 여성의 43.7%가 여성청결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혼과 고연령 여성에서 더 자주 사용한다.

(2) 여성위생용품 중의 화학물질

여성위생용품에는 유해 영향을 초래하는 물질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거나 비의도적으로 존재한다. 여성위생용품의 기능을 위해서 제품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생리 관련 제품의 흡습제(예를 들어 탐폰의 viscose rayon)와 여성청결제의 보존제(예를 들어 parabens)가 있다. 다이옥신, 농약 등도 검출된 적이 있는데 일부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생용품에 사용되거나 검출이 보고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

o 휘발성유기오염물질: 강원대 김만구 교수는 일부 1회용 생리대를 방출챔버(체온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스티렌, 자일렌 등의 물질을 검출하여

2) 김정숙, 김금란. 2015. 여성청결제 사용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 Kor J Aesthet Cosmetol. 13, 267-274

보고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Women's Voices for the Earth가 2014년 8월 4종의 올웨이즈 생리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또한 스티렌, 클로로메탄, 클로로에탄, 클로로폼, 아세톤을 검출하였다. 이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물질이어서, 피부 특히 여성 생식기계점막 등을 통한 노출 경로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는 정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 접촉을 통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생리대와 탐폰에서 다이옥신류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생리대에 흡습제로 사용되는 fluff pulp에 오염될 수 있는데다가 염소 표백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 7종에서 다이옥신류 물질을 분석한 결과 미량의 다이옥신(TeVCDDs, OCDD, TeCDFs, PeCDFs)과 다이옥신유사 PCBs가 검출되었다.³⁾ 프랑스의 '60 Million'은 생리대와 탐폰과 팬티라이너에서 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다.

o 농약류와 기타 유기오염물질: 프랑스의 '60 Million'은 생리대와 탐폰과 팬티라이너에서 미량의 다이옥신 이외에도 유기인계농약 및 피레스로이드계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다. 프랑스의 생리대 제조업체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팬티라이너에 사용된 유기목화에서 글라이포세이트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글라이포세이트는 라운드업레디 유전자조작농산물에 사용하는 주요 제초제인 라운드업의 주요성분으로 발암성이 의심되고 있다(IARC group 2A- probable). 최근 중국에서 생리대 16종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에스터(PAEs)를 분석한 결과 DIBP, DBP, DEHP 등의 물질이 평균 1 mg/kg 이상으로 측정되었다.⁴⁾ 유사 연구사례가 드물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o 보존제: 여성청결제품 즉 와입스, 테오도란트, 가려움증연고에 보존제로 파라벤류(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이 중 몇 물질은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보고된 여성청결제품 중 유해화학물질에는 염화벤제토늄(Benzethonium chloride), 디아졸리디닐 우레아(Diazolidinyl urea), 디엠디엠 하이단토인(DMDM hydantoin) 등의 보존제가 있다. 이 중 어떤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 한편 향제품도 많이 쓰이고 있으나 향성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유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D&C Red 33, Ext. Violet 2, DF&C Yellow No. 5 등 착색제가 있다.

3) Ishii S. et al., 2014. Risk assessment study of dioxins in sanitary napkins produced in Japan. Regul Toxicol Pharmacol. 70, 357-362

4) Chai et al. 2017. Contamination and health risk of phthalate esters in marketed sanitary napkins from China. China Environmental Science. 37, 1954-1960

3. 생리대 안전성 우려와 진단

(1) 생리대 안전 문제제기 배경

미국의 민간단체인 Women's Voices for the Earth(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는 여성위생제품의 독성화학물질이 초래하는 잠재적 건강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⁵⁾. 이 보고서는 여성위생제품이 다양한 내분비계교란물질(또는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생리대 안전성이 문제가 된 것은, 여성환경연대에서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에게 의뢰하여 2015년 생산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각 5종을 대상으로 방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양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고 나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 식약처와 해당업체를 초청하여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정확한 업체명과 오염수준을 공개하지 않고 식약처와 해당업체에만 정보를 보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기 때문에 사회 의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8월 특정 생리대 제품명이 공개되고 소비자의 피해 보고가 잇따르면서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진단

여성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1회용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본격적인 사회 의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생리대의 안전성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이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여성건강과 화학물질 노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다음 세가지 지점에서 반성 또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지엽적인 문제로 좁혀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진단하려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 생리대를 둘러싼 안전성 문제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위해(risk) 영향에 대한 논란으로 축소하였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왜곡한 것이다. 애초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측에서 분석한 대상물질이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과 이를 통해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사회에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회적 논란은, '손가락을 보느라 정작 달은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었다. 1회용 생리대 사용의 피해보고가 잇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소는 외면한 채, 국가기관과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의 시험방법 타당성과 결

5) Women's Voices for the Earth. 2013. Chem Fatale- Potential Health Effects of Toxic Chemicals in Feminine Care Products. Scranton, A.
<http://www.womensvoices.org/feminine-care-products/chem-fatale-report/>

과의 신뢰성, 위해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비슷한 노출경로를 갖는 여성청결제 등의 여성위생용품 전반에 대한 검토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청결제는 외부생식기의 청결과 염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⁶⁾ 질점막 등 민감한 부위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여성청결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여성의 몸으로 전달되어 건강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용인구의 수와 잠재적 건강피해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생용품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화학물질 노출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는 미미한 수준이다. 드러난 문제로부터 교훈을 찾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은 책임 있는 관리자의 자세이다. 소 잃고 외양간부터 고치는 건 맞지만 그 옆의 마굿간의 안전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셋째, 화학물질 오염을 당연시하고 위해성평가만으로 문제를 진단하려는 관행을 성찰해야 한다. 생리대에서 검출된 ‘독성물질’이 왜 쓰였는지 돌이켜보고 이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논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가 ‘허용가능한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건 안전관리라고 할 수 없다. 제품에 의도적으로 포함된 유해한 물질이라면 제조 생산 과정에서 없애거나 독성을 줄이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염을 피할 수 없는 물질이라면, 충실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량적 위해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재 오염 수준이 ‘안전’함을 강조하려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기업을 보호대상으로 두는 성장 중심의 산업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준다.

4.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

생리대 안전성 확보는 여성건강을 위한 출발이 되어야 한다. 생리대 사용에 관련된 건강피해 호소의 내용이 특이성(specificity)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원인 탐색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1회용 생리대에 존재하는 위해요인을 찾아 생리대 안전관리제도로 포함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조치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과학과 지식의 한계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시간이 필요한 조사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외부생식기에 직접 사용되는 비슷한 제품으로 질염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질세정제가 있는데 이는 의약(외)품으로 구분되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over the counter) 판매된다.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부위에 직접 사용됨에도 전성분 표기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포괄적인 노출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생리대 전제품에 대해 80여종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해평가(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생리대 안전성을 진단하려고 한다. 초기에 정부가 10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초점을 맞춘 위해평가로 생리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려 했던 것으로부터 진일보한 조치이다. 하지만 현재 검출이 확인된(식약처에 의해 검출이 확인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지금까지 1회용 생리대에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된 여러 유해화학물질의 일부일 뿐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위해요인에 대한 노출평가를 바탕으로 위해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잘 설계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알고 있는 유해물질, 알고 있는 독성영향’에만 근거한 위해성평가만으로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독성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학조사는 생리대 자체와 사용 양상을 고려한 생리대의 위해요인이 여성들이 호소하는 건강피해와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학조사는 화학물질 중심의 위해평가에서 놓칠지 모르는 위해(가능한) 요인을 골라내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이 반드시 화학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더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드는 노력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가슴기살균제 사건의 경험은 정부가 이른바 골든타임을 연거푸 놓치면서 피해자의 조사와 구제 조치가 지연되었음은 반면교사이다.

5. 생리대 안전에서 여성건강으로

생리대 안전성 이슈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여성 건강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생리대 안전문제는 다음과 같은 지점의 노력을 요청한다.

첫째, 생리대 안전문제는 여성청결제 등 여성위생용품의 안전성 확인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리대와 비슷하게 민감한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갖는 신체 부위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이고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서 최근 발의된 Robin Danielson Feminine Hygiene Product Safety Act of 2017법안을 참고할 만하다.⁷⁾ 이 법은 국립보건원이 여성위생제품에 포함된 성분(오염물질, 향, 발색제, 염료, 보존제)이 제품을 사용하는 여성의 건강영향과 제품을 임신기 즈음에 사용한 여성의 아이들에 초래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외부생식기에 직접 적용되는 각종 제품들(피임도구와 성운활유personal lubricants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건강피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⁸⁾

7)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2379>

8) 여성건강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지 않지만 어린이 기저귀도 생리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생식기계를 통한 유해물질 노출과 이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와 관리망을 개선할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위생용품과 화학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신고, 조사, 대책 마련, 구제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 권리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환경부 환경보건법의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확대하여 다른 부처 소관이라도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생리대와 같은 제품의 사용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청원권이 보장되었더라면, 생리대의 안전 문제가 뒤늦게 나타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여성건강의 중요한 노출경로임을 고려하여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에 대해서 ‘유해성’에 근거한 관리가 필요하다. 노출경로가 취약하고 잠재적인 건강피해의 심각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해성을 정확히 추정하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유해성평가를 즉각 하지 못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등이 있는 물질이라면 유해성에 근거해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체 가능한 물질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생리대 안전에서 국민 건강으로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겪으며 일상 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친숙한 제품이 독성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심대한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 이후 포괄적인 검토와 법의 정비를 통해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부터 최근의 생리대 문제까지 반복되는 화학물질 안전 문제는 국가의 화학물질 안전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은 국민의 각자도생으로 이어진다. 지속되는 실패, 반복되는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막기 위한 노력의 실마리를 전문성과 일관성이 있는 관리체계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어 있는 유해성평가 구조는 사각지대를 드러내기 쉽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건강피해의 신고, 조사, 대책마련을 위한 체계도 부처별로 미흡하거나 전무하다.

첫째, 통합 유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분절화된 관리의 제한점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 매체와 재료 등으로 나뉜 분절적 관리는 결국 실패로 귀착되기 쉽다. 물론 각 부처의

대한 안전성 확인도 매우 중요하다.

들을 인정하면서, 전문성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부처간 조율과 협력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 안전보건 통합관리망을 촘촘히 개선할 수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를 예고한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좋은 예다.⁹⁾ 그러나 수평적 지위의 부처간의 조율과 협력은 보통 쉽지 않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화학물질청(ECHA)과 비슷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기관(가칭 ‘화학물질청’)을 설치하여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할하는 여러 부처들의 관리 역할과 연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전문성과 사각지대 없는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 위해성평가 체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둘째, 현재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방법론적 도구는 위해성평가다. 하지만 위해성평가에만 의존한다면 화학물질 안전망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 화학물질의 알려진 독성정보에만 근거해서, 매년 수백종씩 늘어가는 화학물질과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측하거나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보건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이용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영향 문제를 위해성평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보건 역학조사로 보완할 때, 미처 안전망에 걸리지 않았던 위해요인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시 위해성평가에 환류되어 안전망을 더욱 내실 있게 만든다. 이와 같은 기능을 모든 부처에 두어 각자 분절적으로 운용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역할을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기관(‘화학물질청’)에 부여하거나 가칭 ‘환경보건청’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화학물질 노출의 건강영향 신고로부터 조사와 관리방안 개발까지 아우르게 하고 이를 관할 부처의 업무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리대 안전 문제는 생활환경에서 늘상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도전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의 위기를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기회이기도 하다.

9) 식약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뉜 화학물질 관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합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위해성평가의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는 것이 골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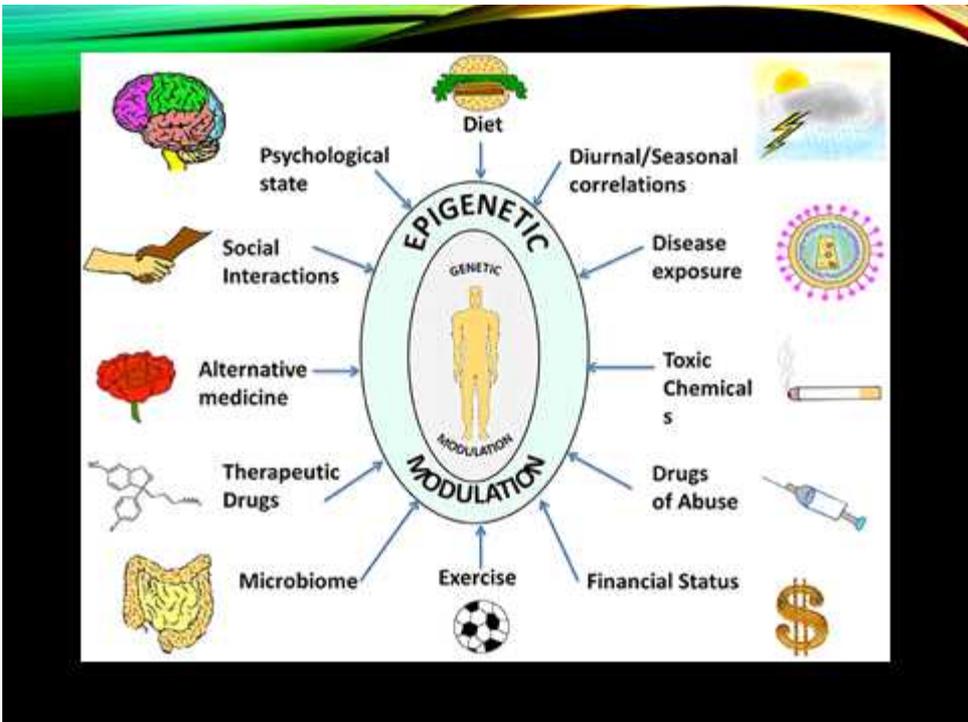
발제2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대책

조현희 의사 |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 ppt 자료 중 일부 첨부합니다.





DNA 발견 후 세라포릭은 후천적 형질 변화도 유전된다는 후성유전학 연구의 열쇠 제공

제임스 왓슨은 DNA의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좋은 형질이 유전되는 것은 관찰지만 그것이 [질환] 이라면 ?

1. DNA 변형
후성유전학은 DNA의 염기서열을 변경하지 않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합니다. DNA 메틸화, 히스톤 변형, 비코딩 RNA 등은 DNA 변형의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2. 환경적 요인
후성유전학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자 발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스트레스, 식이, 운동, 화학 물질, 감염, 사회적 상호작용은 후성유전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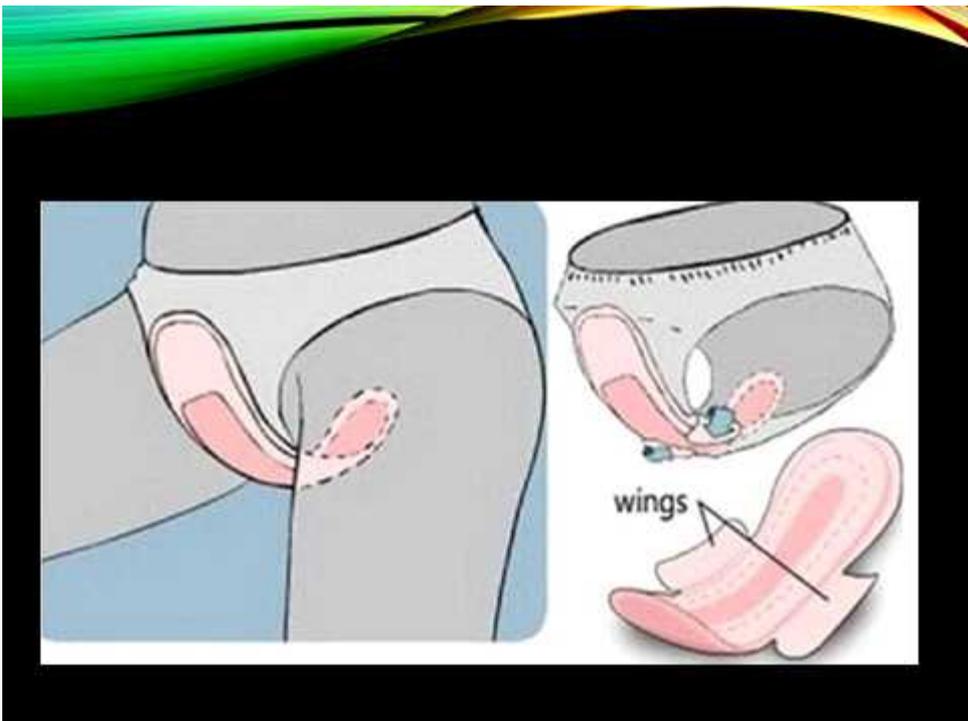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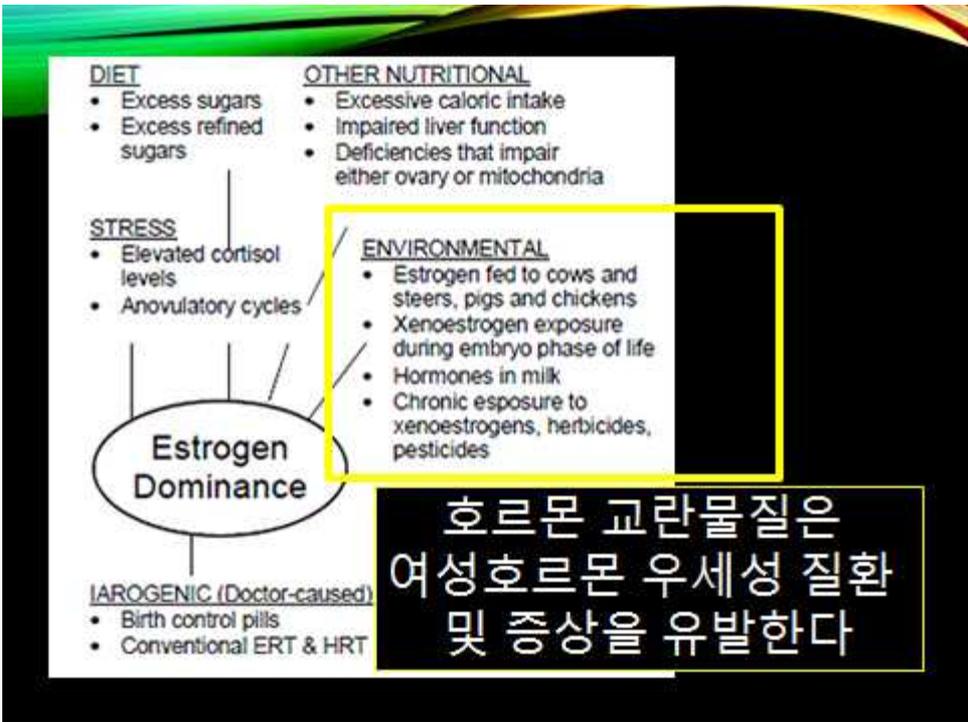
ESTROGEN DOM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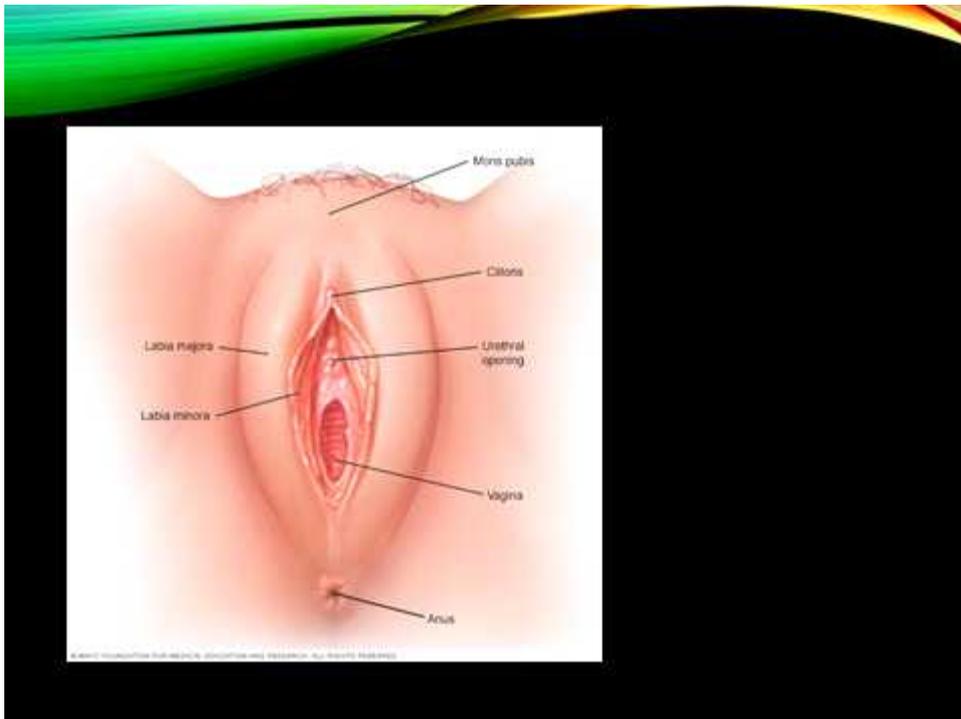
The hormonal imbalance that can cause:

- Mood swings & depression around cycle time
- Weight gain
- Breast tenderness & edema
- Variations or skipped cycles, infertility
- Vaginal dryness or itchiness
- Excessive or scanty blood flow during periods
- Cyclic insomnia, night sweats & fatigue
- And more!

Butternutrition.com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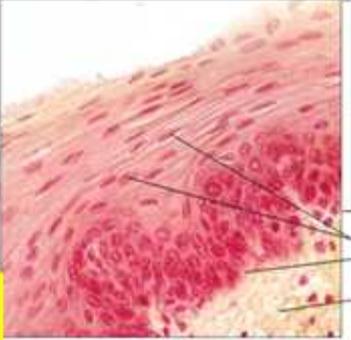
(a)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Description: Thick membrane composed of several cell layers; basal cells are cuboidal or columnar and metabolically active; surface cells are flattened (squamous); in the keratinized type, the surface cells are full of keratin and dead; basal cells are active in mitosis and produce the cells of the more superficial layers.



Function: Protects underlying tissues in areas subjected to abrasion.

Location: Nonkeratinized type forms the moist linings of the esophagus, mouth, and vagina, urethra and anus; keratinized variety forms the epidermis of the skin, a dry membrane.



Photomicrograph: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lining the esophagus (430x).

비각질 중층 편평상피 : 질, 식도, 입안, 요도, 항문

THE VULVA

- Different epithelia, from keratinized squamous epithelium to squamous mucosa, cover the vulva.
- The labia minora are rich with sebaceous glands but have few sweat glands and no hair follicles.

대음순 : 각질화 (0) is neither pigmented nor
소음순 : 각질화 (X), 점막 g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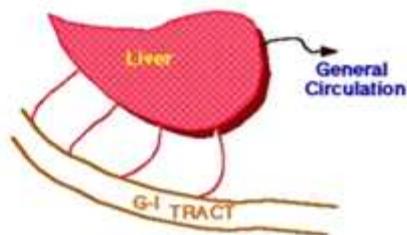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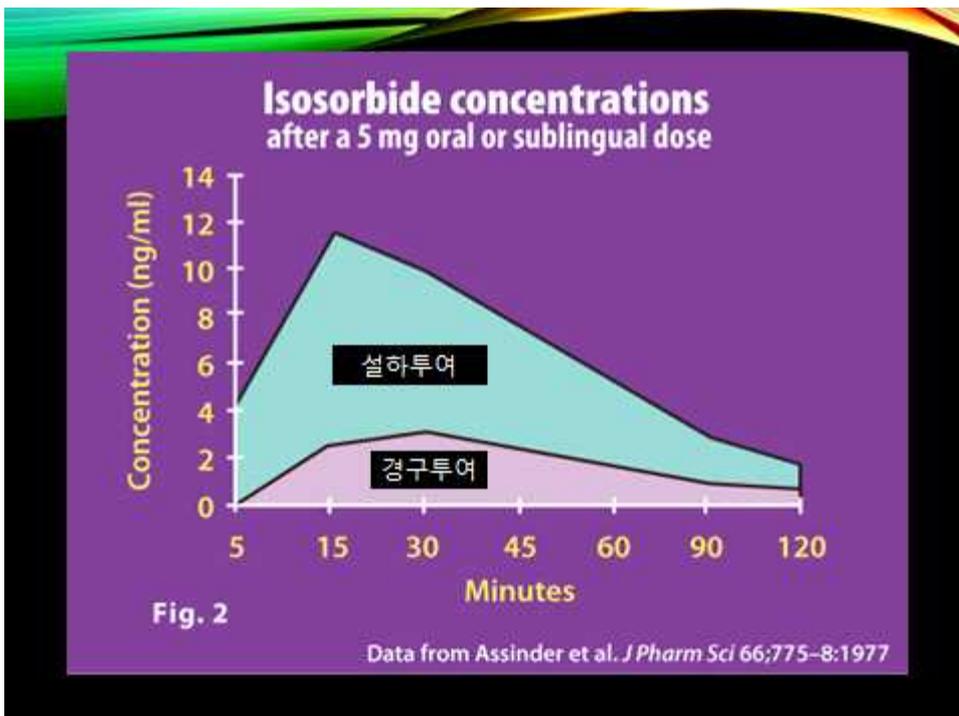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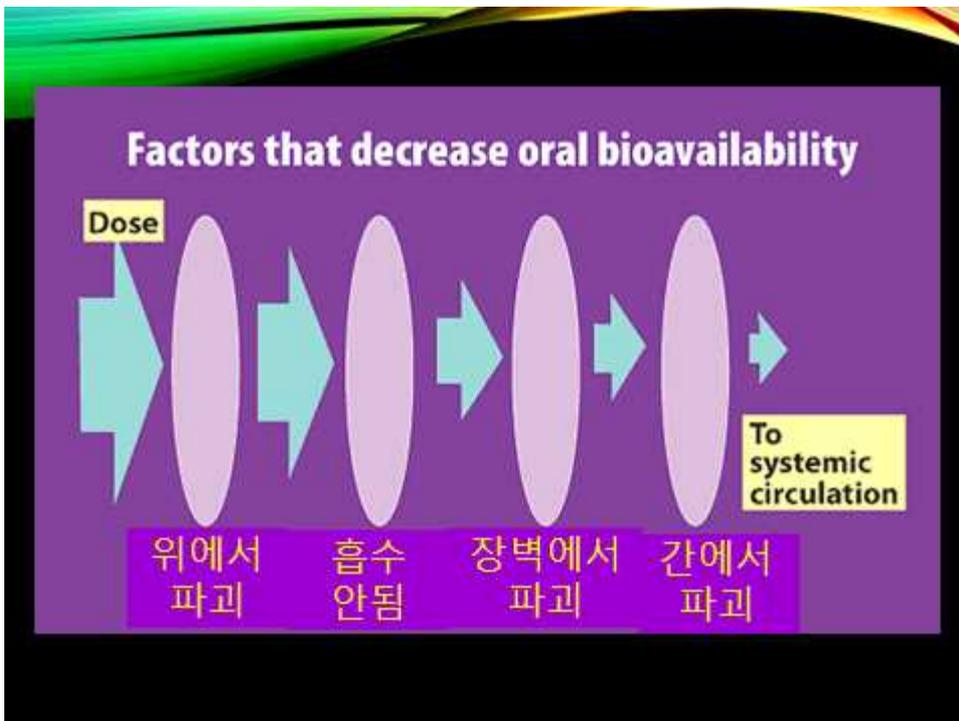
First pass metabolism:

- It means drug metabolism occurring before the drug enters the systemic circulation.
- Results in decreased bioavailability.
- Decreased therapeutic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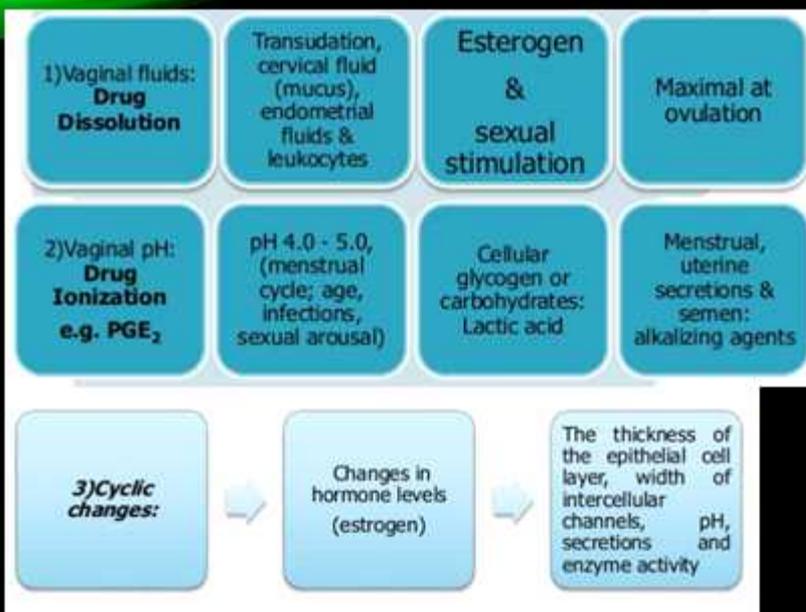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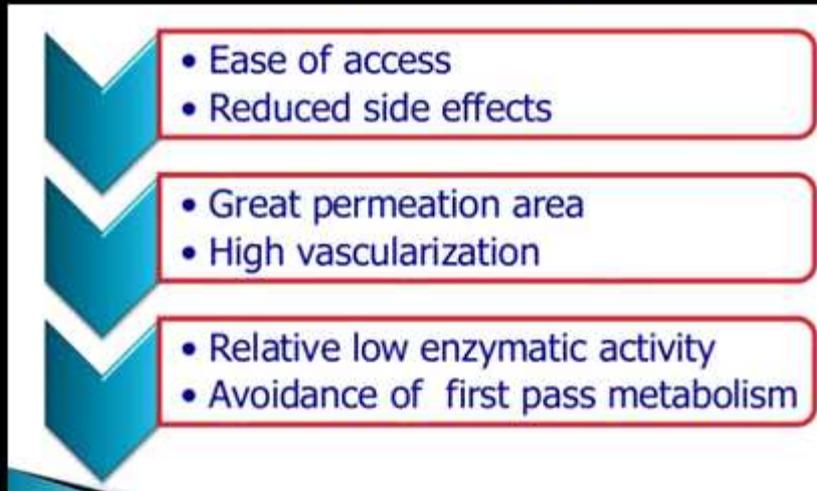
Bypass First pass metabolism:

- IV route
- Sublingual ro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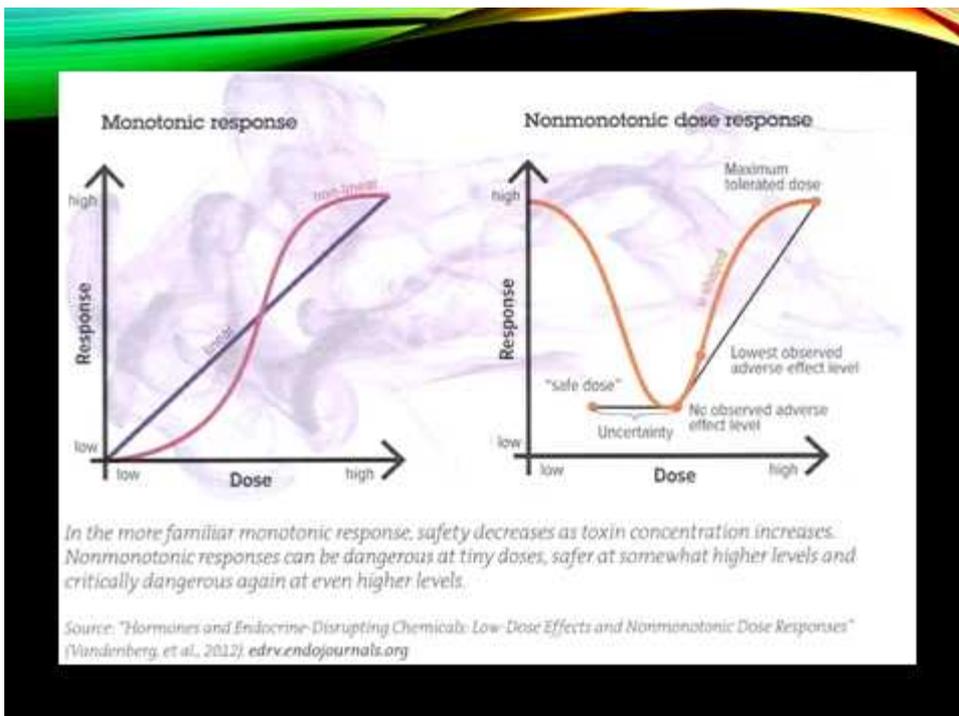


경질, 경점막 투여 장점



Dissolution to surrounding polymer structure	Diffusion through polymer matrix	Partitioning and diffusion through vaginal fluid	Uptake and penetration through the vaginal mucosa	Absorption to blood
--	----------------------------------	--	---	---------------------

◦ **Vaginal wall**
lipodal pathway and aqueous pore pathway





범인은
누구인가 ?

1. 호르몬 교란 물질의 body burden 효과
2. 비경구 흡수의 특성
3. 질과 외음부의 해부학적인 특성
4. 호르몬 교란물질의 용량-작용 곡선의 특성
5. 호르몬 교란물질 해독작용과 여성호르몬의 작용

- 면 생리대를 사용했던 여성들과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했던 여성들의 산부인과 질환 발생율, 생리패턴 비교
(자궁초음파 비교)
- 정기검진을 받는 릴리안 사용 여성에서 의료기록 리뷰
- 팬티 라이너, 생리대 실험시 PH 변화 고려



- 생리가 줄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 생리란 것이 원래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것 아닌가?
 -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발제3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 생리대 사태 진행경과와 제안

이안소영 사무처장 | 여성환경연대

INDEX

- 01 일회용 생리대 수면위로
- 02 경과_여성환경연대활동
- 03 본질에서 멀어져간 전개
- 04 생리대 넘어_제안

01 일회용 생리대 수면 위로 떠오르다

1. 일회용 생리대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

-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생리대 논란들:

2000년 초반 부가가치세 논란
2006 포름알데히드 초과 생리대
2016년 깔창생리대
그리고 2017...

- 구전 이야기만 무성, “면생대리대로 바꿨더니 생리통이 사라졌다”

- SBS 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튼:자궁의 경고>

- 외국사례: WVE(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미국), 6천만의 소비자(프랑스) :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02 경과_여성환경연대 활동(2017.3~ 9.)



03 본질에서 멀어져 간 전개_ 식약처

1. 판단1

✓ 여성단체가 과학적이지 못한 검출실험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발표

-> 시민의 불안을 부추김

✓ 비과학의 이유_ 1)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음.

2) peer-review 를 거치지 않음

2. 판단2: 문제는 접촉제다

3. 진단과 대안

진행 전수조사(품목검사 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9월 발표) -> 86종(연말 발표) *제품명 미발표-> 발표

4. 결국, 식약처의 사건축소와 급급한 대응

“노력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의무 방기다”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 여성환경연대 5-6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제안-> 최도자 의원 발의 -> 2016년 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 통과 but, 생리대등 제외 -> 의원 올해 6월 재발의 -> 10월 통과?

03 본질에서 멀어져 간 전개_ 언론

>> 한동안, 의혹 프레임에 갇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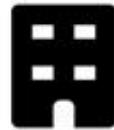
✓ 생리대 시장 점유율 높은 외국계 대기업과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토종 중소기업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 한다.



“단체가 금전적 지원받음”
“단체임원이 의혹”
“검출실험비 의혹”



“기업도산과
일자리 걱정하는 전화”



“고소장 제출”

여성건강
대책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을까

장애여성과 생리, 그 불편함에 대해서

여성건강취재팀 | 장애여성 | 장애여성

여성들의 불안3 : 대안조치 선택할 수 없다



[김상희의 특별한 시선] 장애여성의 눈으로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를 다시 생각하기

잠정 비닐봉지와 생리

여성들에게 생리 혹은 월경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아마도 긍정적인
을 듣기 어려울 것이다. 생리한다는 것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칙적으
로 생리를 한다고 해도 늘 '그 날'이 다가오면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건강증진과 불편을
느껴야 하고 양이 많은 날엔 혹시 새지는 일을까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생리 중후군이나
생리통이 심한 여성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용의

그렇다면 장애여성인 나는 발암물질 생리대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어
른 문제이든 대안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생리대 문제가 남
성 사회에 보편적인 문제였다면 일당계할 수도 있었지만) 생리대가 개발된 것처럼 장애여성
이 겪는 불편함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현재 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에서, 생리대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만들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생리대 사태는 여성들만의 문제 이전에 국민의 문제이고, 장애여성들만의
불편함에 대한 문제 이전에 국민의 불편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 | 김상희 (노동장애인직업생활센터 활동가)

* 이 글은 씨앗이내에 실린 글입니다.

03 본질에서 멀어져 간 전개 와중에서_ 다시 여성환경연대(1)

1. 우리의 목적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성건강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안전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기업, 맘놓고 쓰는 여성.

2. 질문: 생리대 이슈가 아니었다면, 여성단체가 제기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공방을 벌였을까?

‘그 실험을 한 배경이 뭐냐

“배후 없다. 우리가 우리의 배후다!”

생리대를 넘어 여성의 몸, 여성 건강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 태도를 확인한 사건이었다.

03 본질에서 멀어져 간 전개 와중에서_ 다시 여성환경연대(2)

1. 제기된 문제들과 답

- ✓시민단체의 검출실험의 완벽성은 어디까지? 전수조사? 유해성 평가? 위해성평가? 문제제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미량은 안전하다?
- ✓피부에 안 닿으니까 안전하다?

2. 제기된 요구들

- ❖ 평생 쓰는 생리대, 안전하게 쓸 권리 보장하라.
- ❖ 안전한 생리대는 인권이다.
- ❖ 월경에 치열스
- ❖ 국가란 무엇인가: 가임기 여성지도' vs. 방관, 개인책임으로 몰기
- ❖ 사람중심 접근의 중요성: 유방암 지도(WEN), 시민과학자. “우리가 알고싶은 문제는, 해결싶은 바는 무엇일까”를 잊지 않아야.

13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생리대 사태의
본질은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건을 기업
이 생산유통, 정부는 방관해왔고,
여성들은 불안해하며 40년동안 매달
사용해왔다. 이젠 사회 각계가 함께 종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14

04 그럼,이제 어떻게 _생리대 안전, 여성건강 그리고 Beyond

1. 일단은 안전한 생리대

1) 정부 당국, 정책

- 제대로 된 전수조사 : VOCs 로만 제한말라. 다이옥신,농약 등
- 역학조사 : 역학조사에 젠더 전문가,여성/환경단체 참여 필요
- 통합관리 제안 :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2) 기업 책임도 무겁다: 법적 기준 지켰다? -> 안전 선도기업

3)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제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2. 화학물질 안전에서 성평등한 생명안전 사회로

- 생리대를 넘어서 여성용품 전반으로 : 여성청결제, 질세정제,콘돔
- 물품관리에서 월경권까지 : 월경혐오, 생리휴가,무상생리대
- 월경권 넘어 여성건강 전반으로 : 성과 재생산건강
- 여성건강, 화학물질 안전 넘어 노동권과 주거권까지 : 일중독 사회, 소비주의 넘어서기

15

자유의 리듬에
맞게, 천천히
월경에
치얼스

감사합니다!!

16

토론1

위기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

고혜미 방송작가/pd | SBS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튼> 제작

시한폭탄은 종종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등장한다. 시한폭탄의 시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늘 악당이다. 악당에 맞서는 주인공은 예정된 시간 안에 악당을 제압하고 몇 초 남기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한폭탄의 시간을 멈추거나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터지게 하고 당당히 ‘영웅’이 된다.

8월 내내 대한민국은 유해물질로 시끄러웠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인 달걀과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비켜갈 수 없는 월경에 사용하는 필수품, 생리대에 살충제와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것은 시민단체 (살충제 달걀은 ‘한국소비자연맹’, 생리대 유해물질은 여성환경연대)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은 ‘언론’이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시한폭탄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알린 것은 시민단체였지만 불 붙은 폭탄을 사람들 속으로 던진 건 언론이었다.

아래 자료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생리대와 [단독]이라는 키워드로 찾은 기사들이다. 이토록 [단독]기사가 많은 이슈가 최근 또 있었을까 싶다. 살짝만 보더라도 기자들이 얼마나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지 알 수 있다.

[\[단독\]발암물질까지 방출... 안전 째짢한 생리대](#) 2017.03.22.

2017.08.30.

[\[단독\] 생리대 유해성 검사 ‘날림’이었다](#) 2017.08.31.

[\[단독\]WHO "생리대접착제, '非발암성' 의미 아냐"...'SBC' 유해논란 가중](#)

[\[단독\] 생리대 문제 제기 단체 소셜펀딩 없었다](#) 2017.08.29.

[\[단독\]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휘발성화합물질 방출 1위](#)

[\[단독\]릴리안 생리대 '화학물질'외 UN 지정 '발암물질'도 사용](#)

[\[단독\]한쪽은 면세 한쪽은 과세...식약처, 생리대 분류기준 '모호'](#)

[\[단독\] 남성인지 묻기도...식약처, '생리대 관련' 황당 질문](#) 2017.09.05.

- 포털 사이트 발췌 -

뜨거운 관심만큼 내용도 선정적이다. 어떤 기사는 머릿기사와 내용이 연관성 없이 따로 따로 인 것도 있다. 선정적일수록 흥분한 댓글들도 주렁주렁 달린다. 선정적인 기사일지 언정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에 충실한 기사라고 박수를 쳐 줄 일이건만 문제의 본질과는 멀어도 한참 거리가 먼 기사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또 전문가 인터뷰를 곁들여 신지만 이 전문가 말이 다르고 저 전문가 말이 다르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한 전문가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물질도 안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과학자를 자처하면서도 공개된 분석 내용조차 제대로 모른 채 토론회에 나와 생리대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폄하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보원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객관성이 기본인 언론의 심각한 책임방기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세계 유례없는 불산누출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으며 화학물질로 인해 생태계와 우리의 생명이 어떤 피해를 겪을 수 있는지 똑똑히 경험했다.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에 매우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언제든지 가습기, 생리대를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도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알뜰한 준비없는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그리 많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들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채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유감이다. 불붙은 시한폭탄을 시민들을 향해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가장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2017년 2월 26일 SBS스페셜 바디버튼 ‘자궁의 경고’ 편에서였다.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 분석 방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했다. 3월 21일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유해물질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리대 안전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극히 소수의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안전기준에도 없는 물질을 찾아냈으니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일회용 생리대를 매달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이 겪을 혼란이 당연하게 예상되었고 브랜드명은 비공개로 붙여졌다. 하지만 각 업체들에게는 자사의 제품에서 나온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되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촉구가 곁들여진 것은 당연했다. 그러다가 8월 3일 다시 언론에 생리대와 관련된 기사가 재등장한다. 이번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화의 주도자들이었다. 생리양이 줄거나 생리일이 줄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피해사실들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원인으로 특정 생리대의 브랜드가 거론되었으며 2월 방송된 다큐멘터리와 3월 공개토론회를 하며 공개했던 생리대 유해물질 분석결과가 다시 대중 앞에 불려나왔다. 생리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을 안 시점부터 생리대 유해물질 문제가 재점화된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생리대 생산 기업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니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처는 무엇을, 왜? 하지 않았으며, 언론은 무엇을, 왜? 하지 않았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의 핵심은 생리대에서 나와서는 안될 유해물질

이 나왔다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그 유해물질에 발암성 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생리대를 사용해 온 수천명의 여성들이 일제히 유사한 증상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일개 시민단체가 왜 생리대를 분석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야말로 언론이 주목해야 할 진짜 [단독]‘기사거리’가 아니었을까? 식약처에서는 생리대에서 발견된 물질 위주로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인데 왜 문제해결의 시작을 ‘사람’에서부터 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언론에서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땅에 일회용 생리대가 시판되기 시작한 이래 이토록 공개적으로 여성의 월경과 월경혈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을까? 그토록 오랫동안 생리통과 생리대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그 점 하나라도 여성환경연대의 이번 문제제기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여성들의 월경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적지 않았음에도 늘 해결해야 할 주체는 개인이었던 것이다.

이번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에 대해 언론은 사람들에게 위기상황을 알리는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에만 몰두했을 뿐 해결하는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미 수개월 전에 문제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과 식약처도 문제지만 이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적절했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효율적인 위기관리는 가장 안전할 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기 관리의 철칙이다. 다시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 언론은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위기는 반복된다. 위기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토론2

생리대를 통해 본 여성의 건강권

이유림 연구자 |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지난 3월 UN 사회권 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모든 인구가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받고 있는지, 성과 재생산 건강 교육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질의하였다. 7월 정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고, 10대 소녀를 위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무료 생리대를 제공한다고 답변하였다. 정부의 답변에 등장하는 성교육 표준안은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차별적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제공된 생리대의 약 800만개(7만명 분)이 저렴한 ‘발암물질 생리대’였다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의 건강, 재생산 건강의 지위가 이등 시민에 머무르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UN 사회권 규약의 질의 내용은 행정부가 성과 재생산 건강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생리대 사태에서의 대처를 보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보통 ‘SRHR’이라는 영어 줄임말로 불리는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는 서로 중첩되는 4개의 영역을 의미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의 중첩된 범주를 함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과 재생산이 걸쳐있는 영역은 우리 삶 전반의 영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RHR을 중시하는 국제적 담론의 추세는 국가가 정책을 입안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때 성과 재생산과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없이 사회 구성원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 각 국에서 역사와 경험으로 축적하며 형성되었다. 또한 재생산 건강권에서 가장 기초적 내용은 “사회 구성원이 개인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것이다. 생리대 사태를 통해 보았을 때 한국 사회는 성과 재생산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포괄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 건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실현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건강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리대 안전성의 문제는 어떤 생리대를 선택할 수 있느냐의 차원을 넘어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행동을 제약하고, 임신과 출산 및 모자 건강과 연결되며, 심리적 유능감과 신체 활동을 위축시켜 다양한 질병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과 노동 수행을 어렵게 한다. 생리대는 생리를 하는 여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며,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

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대가 건강에 어떠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여성의 경험과 증언을 바탕으로 역학 조사를 하여 안전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여성들의 증언과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알 권리 등 국가의 핵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행정부가 이 사태를 두고 전환적 대처 없이 마치 ‘과학적 검증’의 논란이 있는 사태로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기업은 저마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환불 조치를 마감하고 있으며 여성은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안전함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건강은 소비를 통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의 논리의 편에서 이 사안을 선택지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으며 국가의 무능은 결국 자구책을 궁리해야하는 여성에게 돌아간다.

생리가 선택이 아니라는 목소리는 곧 생리가 여성의 일상적인 생활/삶의 영역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여성의 몸과 건강의 문제를 ‘2등 시민’의 지위로 다루는 동안 화장실에 갈 시간을 제약받으며 노동하는 여성, 36.5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안전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화장실에 자주 가지 말라는 항의 쪽지를 받으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여성, 생리대 교체 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 여성, 고비용의 유기농 수입 생리대를 구매하기 어려운 여성, 다양한 질병이나 신체적인 고통,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등 이미 생리의 문제는 개인이 처한 삶의 조건 안에서 불평등과 건강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역할은 현재의 조건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생리 용품에 대한 교육과 사회 전반의 문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리 용품의 가용성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나와 우리의 안전을 구하는 것, 자본의 논리 앞에서 이미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건강에 대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숙고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이며 생리대 사태 역시 그 연장에 있다. 국가의 역할은 여성 건강의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문제의식과 정책 입안,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확립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여성의 삶과 증언, 시민의 목소리가 그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3

생리대 안전성 조사는 시작, 안전한 생리대로 여성건강권 확보를!

박지아 여성위원장 | 정의당 서울시당

생리대는 언제나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슈였다.

지난해 5월에 소위 ‘깎창 생리대’ 문제를 접하게 된 국민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깎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하고 그러느라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국민들은 성금을 모으고 생리대를 전달했으며, 지자체들은 저소득층에 생리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리대 가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자 안타까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심상정 의원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생리대 회사의 매출 총이익은 40%에 육박한다. 종이와 펄트류를 생산 판매하는 동종업종의 이익지표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생리대 가격은 천정부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7월 대비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3.2% 상승했지만 생리대는 26.3% 올랐다. 생리대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의 2배 수준이다.(통계청) 심지어는 생리대 재료인 펄프와 부직포 가격은 2010년보다 30%와 8% 떨어졌다.(심상정 의원) 재료값은 떨어지는데 생리대 가격은 올라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가격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던 것이다. 가임기의 여성이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무기삼아 제멋대로 가격을 부풀려 왔던 해당 회사들과 그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생리대 가격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 다시 생리대는 분노의 초점이 되었다.

이번 역시 시작은 작은 문제제기였다. 여성들이 활동하던 SNS 공간에서 특정 제품 생리대를 사용한 후 부작용이 생겼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기사화가 되고, 여성단체가 조사를 시작하자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조사결과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모든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나왔다는데 도대체 어떤 걸 써야하느냐'는 여성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지금도 현재진행중이다.

정의당이 '생리대 안전성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2,427명(9월 14일 4시 현재)이 청원서명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며,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에 대한 명쾌한 해결방안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정의당은 생리대 문제가 단순히 몇몇 부도덕한 기업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공동역학 조사위원회'를 두고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할조사'를 실행하고자 한다.

왜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공동역학 조사위원회' 인가

현재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은 식약처 대신 국무총리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둘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 이유는 생리대의 문제가 정부의 한 부서가 진행할 일이 아니라 전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판단에서이며, 두 번째 이유는 식약처가 조사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이다.

첫 번째 이유는 '생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국민 절반의 숙명입니다'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국회상임위 발언으로 가름해도 될 것이다. 국민 절반이 평생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 더할 말이 필요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서관할 기관을 식약처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식약처가 이 문제를 대해왔던 행보를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으로 여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서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고는 여기기 어려운 행보를 이어왔다.

국민들이 스스로 생리대의 안전성을 문제제기하고 여성단체가 나서서 생리대의 안전성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나친 우려보다 식약처의 위해성 평

가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역학조사는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우려와 피해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소관하는 부서의 태도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식약처가 국민을 위한 식약처인지, 기업을 위한 식약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만이 아니라 식약처의 기준과 허가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구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생리대의 심사 규정을 더 완화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약사법이 개정(2017.12.3. 시행예정)됨에 따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리대는 빠졌다. 생리대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생리대는 직접 흡입하거나 인체에 흡수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번 생리대 파동에서 보이듯이 생리대는 여성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품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식약처는 방기한 것이다.

더구나 2009년 이후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는 1천82개 품목 가운데 고작 4개(0.4퍼센트)였다. 식약처는 규격 기준을 맞추겠다는 기업들의 구두 통보만 받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성이 논란이 되자 오는 9월 실시하는 정기 품질 조사에서 해당 제품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하고, 그것도 정기조사를 9월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나몰라라하는 식약처의 행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큰 우려지점이다.

여성단체들은 약 15년 전부터 일회용 생리대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성분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왔다. 한 여성단체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2000년에 실시했으며, 이미 당시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의 약 60%가 '생리대 사용에서 비롯된 피부질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여성단체는 생리대 제조사에 생리대에 포함된 원료와 화학물질, 염소표백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제조 비밀이라고 답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식약처도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2005년 이미 식약처가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국내 생리대의 안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포름알데히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유해 물질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이런 기준 및 시험방법이 지켜지는지에 관한 보건당국의 관리 및 감독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생리대는 지난 1971년부터 시판됐지만 이를 수거해서 제품이 기준에 맞춰 생산됐는지를 검사하는 '수거검사'를 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회용 생리대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도 전무한 상황이기에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음에도 십년이 지나는 동안 식약처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에야 104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법과 검출량,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따라서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의 조사기관으로 식약처는 적절하지 않으며,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요구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그동안 생리대의 안전성을 문제제기해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왜 생리대 전수조사와 역학조사인가

현재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 검사 항목은 포름알데히드와 색소, 형광물질, 산성도 등 9가지뿐이다. 논란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유해물질 검사 항목은 아예 없다.

이러한 조사만으로 생리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한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리대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한다. 연령에 따라,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제품에 따라, 월경 기간에 따라, 건강정도에 따라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생리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역학조사 없이 유해물질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조사만으로 생리대의 안전성은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사는 시작일 뿐이다

생리대의 안전성 조사는 시작일 뿐이다. 안전성 조사로 문제가 있는 기업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알아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생리대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답해야 한다.

정부를 믿고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건강을 침해당한 여성들에게 답해야 한다.

일회용 생리대가 허가된 70년대부터 40년 동안 왜 생리대는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받아 왔는지, 여성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국민안전의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는지 답하고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총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생리대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가 지금부터라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생리대 안전문제는 안전문제를 넘어서 수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깔창 생리대' 파문 이후로 지자체가 진행하는 생리대 지원사업도 안전성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내놓지 않으면서 지원사업이 멈추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북은 2017년도 지원이 시작된 지난 8월부터 도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생리대를 지원했다가 유해물질 파동이 불거지자 모두 회수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실상 두 달간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했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리대 안전문제가 긴급하며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빠르게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공·동·역·학 조사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하고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의 문제임을 각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발행일 2017. 09. 20.

발행처 여성환경연대

연락처 02-722-7944 kwen@ecofem.or.kr

※본 자료는 여성환경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